

평화당,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첫 추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여야 4당 중 당 차원에서 추인을 한 것은 평화당이 처음이다.

평화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틀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 최고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 해당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결을 모았다.

이들은 또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5·18 왜곡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평화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에 호남 지역구 의원수를 줄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충하는 방식 등으로 노력하기로 정했다.

최고위원인 유성열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호남 지역구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거나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든지, 과거 도농복합시로 대도시 의석을 줄이고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대체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적하며 "이런 장치가 도입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립서비스고 덕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의미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구 축소 우려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호남 지역구 축소 우려 문제는 추후 보완기로 "권역별 비례제 적용하면 호남 의석 안 줄을 것" "5·18 왜곡 특별법 반드시 처리...양보못해"

과 관련해 "최근 이곳저곳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가 5~7석 축소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어찌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할당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석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유성열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호남 지역구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거나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든지, 과거 도농복합시로 대도시 의석을 줄이고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대체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적하며 "이런 장치가 도입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립서비스고 덕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의미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유 의원 견해에 관해 "이건 결국 선거제 협상을 다시 하려는 얘기"라며 "선거구 획정 권한이 확정되어 있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 노력하는 등 보완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이러한 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주 "김학의, 특권층 비리범죄" 한국 "野대표 죽이기" 강력 반발

여야는 19일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진실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진실 규명과 사법개혁을 다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거론한 뒤 "검찰, 경찰은 조직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 규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비리범죄이고 공

고 비난했다. 그는 "복합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 나는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후 첫 일정이야당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이 어떤 할 따름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 최측근 및 금품착취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가 일파만파 퍼지는 데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물

이에 다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선거제와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흠결을 지적하

홍영표 "검·경, 조직 명운 걸고 진실 규명해야"

나경원 "여론 반전 위한 적폐물이 다시 들어서"

권력 유착, 왜곡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다"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지난 수년간 진실 규명 기회가 있었는데도 수사 기관에 의해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 문제를 떠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과거와의 전장에 칼날을 뽑았다"

면서 김 전 차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에서도 나타난다"며 "버닝썬과 김 전 차관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는 등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의장 만난 정동영 "靑, 5·18 진상조사위 출범 노력 안 보여"

"한국당 조사위원 문제 해결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정외대가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을 정외대가 거절했다"며 "차질피일 출범을 미룰 게 아니라 위원회를 출범시키려면 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도 "5·18 진상규명이 시급한데 위원 추천이 안 돼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청했다.

그러면서 "야당 4명에 비교해 3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우리는 출범이 시급했기 때문에 우리 추천할 뜻을 민주당에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황교안 "文정권 핵심 세력 80년대 운동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이들 인맥은 정치권, 좌파언론, 시민단체, 민노총 등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있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발상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에는 이들의 뿌리깊은 카르텔이 있다"며 "그들에게 타협이나 협상은 무의미

하다. 오직 대결적 사고방식만이 지배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공공일자리 확대, 탈원전 등 문 정권의 모든 국가정책들이 이들 집단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거법 등 3법 패스트트랙 추진도 오직 그들의 생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둠의 이합일뿐이다"라고 했다.

뉴스시

'국정농단' 안중범, 구속기간 끝나 석방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중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0시를 넘겨 수

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63)씨,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시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